

정유기업, 에너지세 개편 “울상”

인센티브 약속 흐지부지 ... 2005년 저공해차 도입효과 기대 어려워

정부의 에너지세 개편 방향이 가닥을 잡으면서 경유를 생산하는 국내 정유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휘발유 대 경유 대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 비율을 현재 100대63대44에서 100대85대50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유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언론에 보도된 세제개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안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유기업들은 경유가 아직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울 것이 왔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다가올 환경시대를 대비해 유황 함유량을 30ppm까지 낮춘 초저유황 경유 개발에 주력해 왔지만 시설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7월1일부터 초저유황 경유를 공급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고 관계부처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조사에서도 리터당 20원의 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세금감면 혜택이 없다면 초저유황 경유의 조기 공급은 힘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보급되는 저공해 차량의 공해 방지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유가 공해를 유발하는 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는 연료인 만큼 기존 연료의 오염도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배려가 아쉽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6/16>